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자료집

2024년 1월 31일

목차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경과보고	3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개요	6
조직구성	9
사업계획(안)	11
예산(안)	15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16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경과보고

1. 주요 경과

▣ 2023년 12월 22일(금), 시민사회단체 총선대응 간담회

- 경실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환경회의 제안으로 간담회 개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국 약 2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기구 참여
- 2024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논의, 준비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논의 진행 결의

▣ 2024년 1월 9일 (화), (가) 2024 총선넷 준비위원회 1차 회의

- 경실련 대강당, 전국 약 2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기구 참여
- 주요 활동 방향 및 핵심 활동수단 등 논의
- 대략적인 출범 일정 및 후속계획 일정 확정

▣ 2024년 1월 23일 (화), (가) 2024 총선넷 준비위원회 2차 회의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국 약 2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기구 참여
- 2024 총선넷 명칭, 활동목표 및 조직구성 확정
- 사업계획(안) 검토 및 발족기자회견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

2. 조직 현황

* 2024년 1월 31일 현재까지 참가단체/연대기구 90개 (가나다 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준)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전국 17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로컬에너지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3개 단체)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개요

1. 조직 명칭 및 슬로건, 온라인 공간

(1) 조직 명칭

- 제안 명칭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약칭 2024 총선넷)
- 총선 대응을 위해 2016년, 2020년부터 이어온 시민사회 연대기구의 기초와 활동을 이어받아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과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공동목표와 공동 활동에 기반한 수평적인 네트워크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함.

(2) 슬로건

- 2024 총선넷의 활동방향이 21대 국회 평가 등을 통해 반개혁 법안을 추진하거나 개혁을 반대해온 국회의원들의 '명단 작성',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입법정책 과제 제안', 부적격 후보에 대한 '공천반대·낙선명단 발표와 시민캠페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만큼 '2024 기억, 약속, 심판'을 핵심 슬로건으로 하고, 각 활동에 따라 부제를 변형해 사용하기로 함.

(3) 온라인 공간

- 2024 총선넷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동시에 시민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유권자 행동의 공간으로서 모바일 접근성이 좋은 홈페이지(<https://www.2024act.net/>)를 구축, 제공하고자 함.

2. 조직 결성 취지

- 2016년 촛불혁명과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쌓아올렸던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과 평화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
- 2024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내에서 분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력 정치인들의 신당창당, 소수 진보정당들간의 선거연합정당 추진 등 그 결말을 알수 없는 지각 변동이 한창임. 그러나 복합위기 시대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은 정치권 내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음.
-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거부권 남용과 불통인사, 무능하고도 반개혁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는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지만, 뒤에서는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임. 수차례 공언해온 다당제 정치개혁의 약속을 뒤집고, 거대 양당 독점 강화 선거제 개악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음.
- 모두가 느끼듯이 2024년 총선이 너무도 중요한 선거임. 윤석열 정부의 교만과 폭주를 어떻게 멈출 것인지, 선거법 후퇴나 당장의 의석 확보에 눈이 먼 반헌법적인 위성정당의 재출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이는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고 막아낼 것인지,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과 평화의 담론과 의제가 선거에서 어떻게 화두가 되게 할 것인지 노동시민사회의 지혜와 연대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12월 22일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총선,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간담회’를 진행함. 다가오는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였음.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1월 초 2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한 활동목표와 방향,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오는 1월 31일(수)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약 70일 간의 공동행동을 제안하게 되었음.

3. 활동목표 및 방향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개혁의제를 후퇴시키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한 후보, 불법 및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는 후보 등에 대한 공천반대·낙선명단 발표와 시민캠페인 전개
-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역행, 거대양당의 무능과 개혁실패에 대한 심판
-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 노동, 민생, 평화를 위한 22대 총선 입법 정책 과제 제시
-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장 마련

* 21대 국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을 주로 하지만, 거대양당과 가치 및 정책이 다르지 않은 다른 정당들에 대한 비판 활동도 놓치지 않음.

* 총선 국면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중립성을 유지함.

조직구성

1. 대표자회의

- 모든 참가 단체와 연대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둠.
- 발족 시 개최하되 이후에는 필요 시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제안함.
- 2024 총선넷을 대표하고 활동하기 위해 상임대표단을 둘 수 있음.

2. 운영위원회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운영과 사업 집행을 책임지는 단위로 2024 총선넷 연대기구와 단체 등의 운영 또는 집행책임자로 구성함.
- 격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4 총선넷의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집행을 담당함.
- 운영위원 중 주요 의제 및 영역별 책임자들로 공동운영위원장을 둠.

공동운영위원장단

- 경실련 : 김성달 사무총장
- 참여연대 : 이지현 사무처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 오경진 사무처장
- 한국환경회의 : 정규석 운영위원 및 상황실장

3.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국 연석회의

-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국 실무파견자로 구성함.
- 긴급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여 운영함.
- 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함.

4. 사무국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함.
- 2024 총선넷 실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각 연대기구와 단체에서 파견함.

- 공동사무국장과 실무팀(조직캠페인팀, 정책팀, 운영홍보팀)을 둠.
-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행팀을 신설할 수 있음.

5. 자문 및 특별 활동기구

(1) 법률자문단

- 선거법 관련 법률자문과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둠.
- 단장 : 좌세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법률자문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및 법학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함.

(2) 유권자위원회 또는 유권자행동단

-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유권자위원회나 유권자행동단을 둘 수 있음.

사업계획(안)

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및 출범 기자회견

(1) 대표자 회의

- 일시 장소 : 2024년 1월 31일(수)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앞 ‘모임공간 상연재’ 컨퍼런스룸11
- 2024 총선넷 출범 결의, 조직 및 사업계획안 확정, 출범선언문 확정

(2) 출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월 3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2024 총선넷 출범 취지, 공천반대 기준, 이후 활동계획 등 발표

[‘약속’ 사업]

2. 2024 총선넷이 요구하는 정책공약 발표 및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말 ~ 3월 초
- 진행내용 : 각 의제별 / 지역별 연대기구 및 단체별로 부문별 정책공약 취합 및 발표 *정책 토론회 등 병행할지 추후 논의

[‘기억’ 사업]

3. 2024 총선넷이 선정한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예정)

- 일시 장소 : 2024년 2월 중순
- 발표내용 : 21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 선정 및 발표
- 1차 취합된 명단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선넷 차원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정리 및 발표, 취합된 각 단위별 전체 명단도 함께 발표

4. 총선넷 선정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하순 중 명단 취합상황에 따라 조정
- 내용 : 2차로 취합된 21대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인사, 전직 국회의원, 정부 출신 인사 등 대상 공천부적격자 명단 선정 및 발표

['심판' 사업]

5.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명단 각 정당에 제출 및 면담요청

- 일시 장소 : 2024년 2월 말 ~ 3월 초, 각 정당 중앙당사 앞
- 내용 :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명단 및 사유 공문 각 정당에 전달 및 면담요청

6. 낙선명단 발표와 유권자가 뽑은 '최악의 후보' 온라인 투표

- 일시 : 2024년 3월 중
- 공천부적격자 명단 중에서 집중낙선명단 온라인 투표 진행(3월 중)
- 공천부적격자 명단 온라인 투표를 위한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공천부적격자 명단 중에서 최종 선정된 낙선명단 10명 내외 발표 (3월 20일 경)
*후보자등록신청 기간 : 3/21(목)~22(금)

7.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유권자 행동의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
- 유권자 정보제공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제공
- 낙천낙선 후보자 정보 쇼츠 제작 및 온라인 배포
- 공천반대 및 낙선명단 발표 실내 기자회견 및 각 지역 후보사무실 앞 기자회견
- 2024 총선 시민 캠페인단 구성 및 운영 : 유권자 광고판 (유권자들의 목소리, 대신 전해드립니다)
- * 공식 선거운동기간 3/28(목) ~ 4/9(화) 자정 / 4/10(수) 총선. 4/5(금)~6(토) 사전투표

8. 각 의제/부문 연대기구 및 단체별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및 정책 공약 평가 활동 등

- 오염수 투기반대 운동본부/경실련 공천반대 명단 발표
- 민언련 공정선거보도감시 활동
- 참여연대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 활동
- (가칭)총선주거권네트워크 주거권 공약 요구사항 발표

* 참고자료 : 각 단체에서 제안된 공천반대 기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기후환경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안전평화인권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한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차별 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언론역사민주주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선 후보자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징용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복지노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협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선 후보자 [민생경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 농촌 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 데 앞장선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참고 :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 죄목, 시기 등을 반영하여 함께 제공

: 직권남용, 뇌물, 정치자금법 등 권력형 비리, 선거법 위반(정치자금, 허위사실), 인권침해(학폭 옹호무마), 5대 범죄(위장전입, 음주운전, 학력위조, 논문표절, 부동산다운계약서) 등

예산(안)

1. 수입.

- 2024 총선넷은 필요한 활동비용을 참여하는 단체들의 분담금으로 총당함.
- 전국단위 단체 : 30만원
- 지역단체 및 연대기구 : 10만원
- 이후 추가 사업에 따라 분담금 소진되어 필요할 경우 추가 분담금 요청

2. 지출

- 2024 총선넷 출범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 시민캠페인 및 각종 기자회견 비용
- 주요 활동에 대한 온라인 광고 등 홍보비
- 각급 회의 회의비 및 사무국 운영비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퇴행과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선택합시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바야흐로 위기와 퇴행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먹고 사는 삶이 위협받는 민생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가 숨쉬는 세상,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염원했던 촛불의 바람은 채 반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퇴행의 그림자는 짙고, 시민들의 절망은 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거대양당의 분당과 신당창당, 거대정당의 위성정당과 소수정당들의 선거연합으로 선택지는 늘어나지만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저마다 표를 달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혐오와 퇴행을 넘어서기 위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후보자들과 정당들은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인기영합적인 대책을 늘어놓거나 상호비방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퇴행,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개혁은 흐지부지하고 되려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의 견제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개혁신당과 혁신성장이란 미명하에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새로운미래가 거대양당의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대양당의 지속적인 선거제 후퇴 시도 속에 다른 소수·진보정당은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과 시민사회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저 정치권의 당리당락과 정치공학에만 맡겨둔다면 한국사회,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는 이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퇴와 퇴행을 단 한뼘이라도 막아내기 위해, 적대와 절망의 정치를 거부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개혁을 막아서거나 걸림돌이 되어온 이들, 위기와 혐오, 퇴행에 앞장서온 이들을 기억하고 심판하겠습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부적격한 후보가 공천되지 않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부적격한 후보가 끝끝내 공천이 된다면 시민들의 참여와 제안으로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유권자들에게 뽑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숨쉬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희망의 정책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총선 이후에도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따로 또 같이 행동해나가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그저 투표만 하도록 강요하는 후진적인 선거제도 하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유권자 행동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경로로 부적격 후보들의 이름과 행태를 시민들께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롭게 열린 선거법의 공간에서 유권자 시민캠페인을 기획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서부터 이어져온 시민과 유권자들의 조직된 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민들이 선거의 과정에 더 참여할수록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불법과 부정이 줄어들고 유권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2024년 총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유권자들의 참여와 행동으로, 당면한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는 것을 넘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혐오와 차별, 퇴행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위기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선택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억, 약속, 심판’에 나서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힘을 믿는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참여와 행동을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